

김정은-시진핑-푸틴 ‘텐안먼 反美 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베이징 텐안먼 망루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베이징=신화 뉴스

北-中-러 정상 66년만에 망루 열병식
金, 시진핑 밀착대화... 푸틴과 회담

시진핑 “평화-전쟁 갈림길, 굴복 안해”
트럼프 “美에 대항하는 작당 모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관을 위해 텐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랐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밀착하면서 미국에 대항한 신(新)냉전 연대를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왼쪽에 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을 전면에 세우고 망루에 올라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약 90분간 이어진 열병식에서 통역을 대동한 채 수시로 몸을 기울여 대화를 주고 받았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에 김 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시 주석은 전승절 기념사에서 “지금 인류는 평화를 택할지, 전쟁을 택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화와 대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화민족은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민족”이라며 “과거 선악과 명암이 갈린 투쟁에서 공동의 적개심으로 저항하며 민족 생존과 부흥, 인류 정의의 위해 싸웠다”고 했다.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10년 전 70주년 열병식에 비해 한층 강력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열병식에서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평(DF)-61’과 공중 발사 장거리 미사일인 ‘징레이(JL)-1’,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등 핵 3축 체계(nuclear triad)를 처음 공개하며 미국을 겨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북-중-러 밀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3일 전승절 열병식과 리셉션에 함께 참석한 뒤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민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를 동맹이라고 규정하며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도울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A2·3·4면에 관련기사

與, 의총서 “중수청, 행안부에 설치”... 정부도 수용 검토

의원들 “檢해체 하려면 행안부에”
정청래 “7일 고위당정서 최종결론”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검찰개혁 추진에 의견이 모인 것. 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정책 의총을 열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행안부 안(案)과 법무부

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이후 자유토론이 시작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 대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만 행안부나 법무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3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얘기) 없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결론은 최종적으로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개혁 외에 이달 25일 처리 방침을 밝힌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윤곽도 공유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이승우·조동주 기자
▶A5면에 관련기사

민노총, 26년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

‘사회적 대화’ 참여 투표 과반 가결
李대통령, 이번주 양대 노총 회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 기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 단체인 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을 웃도는 142명이 찬성에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단체가 모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중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A10면에 계속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1. 차별금지법이란 동성애는 물론이고, 남성과 여성 외에 수많은 성(젠더: 사회적 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처벌. 또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처벌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 / MBN 2023. 7. 5)

2.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행정처장님, 국민 대다수(77%)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변경을 반대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90만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남자들이 군대 징집기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징집 연령 지난 후 남자로 되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한국보훈신문 2018.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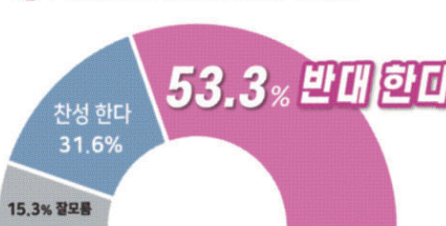
3. 성평등 가족부 명칭 변경 반대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젠더 평등입니다.” 젠더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수많은 성이 있음. 국민 62.5%는 성평등 가족부 명칭 변경 반대 (국민일보 2025. 7. 14)

4. 출산 직전까지 모든 낙태 허용, 그리고 태아생명 죽이고 임신부에게 과다출혈, 자궁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유발할 수 있는(대한의사협회 의견)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남인순의원) 절대 반대. 국민 약 57%가 낙태약 사용 반대 (의협신문 2025.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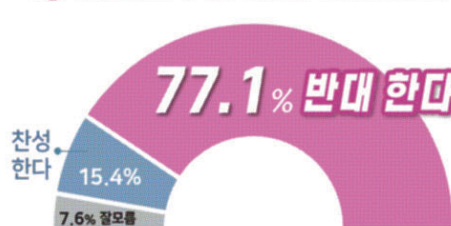
성평등 가족부 명칭 변경 반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반대
낙태 전면허용 낙태약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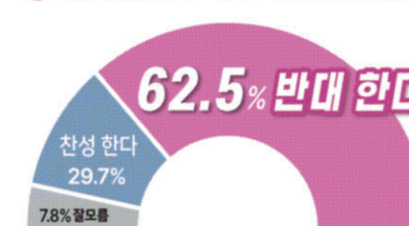
Q.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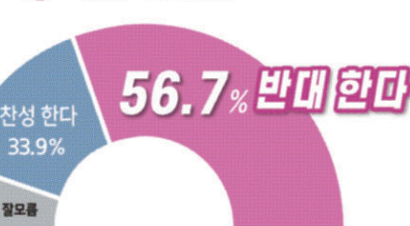
Q.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변경



Q. 성평등 가족부 명칭 변경



Q. 낙태약 사용



◆2024년 10월 21일 ◆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2025년 9월 2일 ◆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4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법원 내 이념 세력인 젠더법연구회 / 국제인권법연구회 / 노동법연구회를 해체하라!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통합국민대회
2025. 9. 27 (토)
상각지역 11번 출구 앞
주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